제1장 국방개혁의 추진방향

국방부는 21세기 정보화된 선진형 신국방체제 구축을 목표로 '국방개혁 5개년 계획(1998~2003)' 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은 중 · 단기과제인 국방조직과 군 구조개편, 방위력개선, 인사제도 및 교육체계 개혁, 국방관리 혁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앞으로는 보다 근본적으로 군개혁을 가속화하고 21세기형 선진정예국방으로 웅비하기 위해 '군사혁신과 군 정보화' 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이다.

제1절 추진 목표 및 중점

2003년까지의 중기 국방목표는 장기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 기간 중에 축적된 기반을 발판으로 중기 이후부터는 한 시대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국방발전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2003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국방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기 충천하고 기강이 확립된 '강력한 정예국군'
둘째, 자긍심 넘치고 사명감 투철한 '전문 직업군'
셋째, 경영혁신과 정보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군대'
넷째,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민의 군대'

이러한 국방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 · 단기적인 국방개혁의 중점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미래 국방환경 및 개념을 설정하고 분야별 군사혁신과 국방의 과학화 · 정보화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강력한 국방력을 창출할 수 있는 선진 정예군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첫째, 한국적 여건에 맞는 경제적인 군 구조로의 개편
둘째, 목표 지향적이고 투명한 방위력 개선
셋째, 합리적인 인사 · 교육제도 발전 및 공정한 병역제도로의 개선
넷째, 효율적 자원운용을 위한 국방관리의 혁신

제2절 추진 경과

국방개혁추진위원회는 1998년 4월 15일 장관직속기구로 발족하여 국방개혁 5개년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각군도 개혁실무추진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국방부와 각군간에 연계성 있는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국방개혁추진위원회는 '국방개혁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1998년 7월 2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다음 본격적인 국방개혁에 착수하였고, 2000년 8월까지 58개 과제 중 총 45개 과제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장기적 차원의 미래 국방설계를 위하여 1999년 4월에는 국방개혁추진위원회 내에 '군사혁신기획단'을 설치하여 20~30년 후의 미래안보환경과 국가발전추세를 분석하여 국방전략을 도출하고, 우리 군에 적합한 전장운영 · 군사교리, 군사기술 · 전력체계, 운영체계, 리더십 · 교육훈련 등의 제 분야에 대한 기본개념과 방향을 연구하고 있다.

아울러 보다 강도 높은 국방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방개혁추진위원장을 장관의 국방정보화 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하였으며, 정보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 · 조정 · 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99년 12월에는 국방개혁추진위원회 내에 정보화 담당분과를 신설하여 운용하고 있다.

제2장 국방개혁의 성과

제1절 군 구조 개편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 운영을 위하여 1998년 12월 국방부, 합참, 각군본부 등 상부기능의 조정 및 조직 개편을 실시하였다.

국방부 조직은 국방정책의 핵심 및 필수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고(부록39 참조), 특히 방위력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의 방위사업실과 합참의 시험평가 기구를 통합한 획득실을 신설하였다. 또한 조달, 품질보증 등과 관련된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들의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조직을 간소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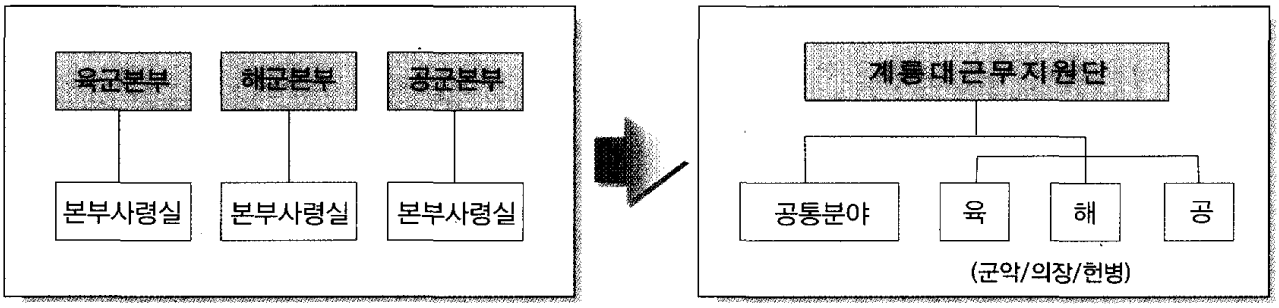
합참은 신속한 작전지휘를 보장하기 위해 통신전자참모부와 작전참모본부의 C4I부를 통합하여 지휘통신참모부로 개편하였으며, 정보참모본부에 정보융합실을 신설하였다. 또한 인사참모부와 군수참모부를 통합하여 인사군수참모본부로 승격시키는 등 합참이 명실상부한 군령의 최고기구로서 통수권자의 전쟁지도를 보좌하고 작전을 기획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하였다.

각군본부는 분산된 C4I기능을 지휘통신참모부로 통합하였고, 전투발전과 화생방 기능 및 조직을 보강하였으며, 방위력개선 집행기능을 전담하는 부서를 편성하였다.

육군의 지휘 및 부대구조의 조정은 보다 더 개혁적으로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제대별 분산 및 지상부대 지원위주로 운용되던 육군항공사를 전략적 · 작전적 · 공세적 운용이 가능한 육군항공작전사령부로 개편(1999. 4)하여 제 병과 및 기능을 통합하였고 권역별 지원전력과 전략예비전력으로 구분 편성하여 강습여단을 육군항작사에 예속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육군항공작전사령부는 제병 협동작전수행체제를 갖춤으로써 제한된 독립작전과 공세 주축전력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단일형태의 특전사 부대구조를 다양한 위협 및 분쟁과 특히 장차 예상되는 비군사적 위협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융통성 있는 부대로 개편(2000. 6)하였다.

북한군이 대규모 화생방 무기로 공격해 올 경우에 신속히 대비할 수 있도록 육군예하에 화생방 방호사령부를 창설(1999. 6)하였다. 그리고 전시에 꼭 필요한 육상, 해상 및 공중으로의 전략적 수송 지원을 기획, 조정, 통제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군수송사령부를 모체로 국군수송사령부를 창설(1999. 3)하였다. 또한 계룡대의 동일지역 내에 육 · 해 · 공군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각군 본부별로 편성, 운용하던 기존의 본부 사령실을 단일지휘체제하의 계룡대 근무지원단으로

[도표 4-1] 계룡대 근무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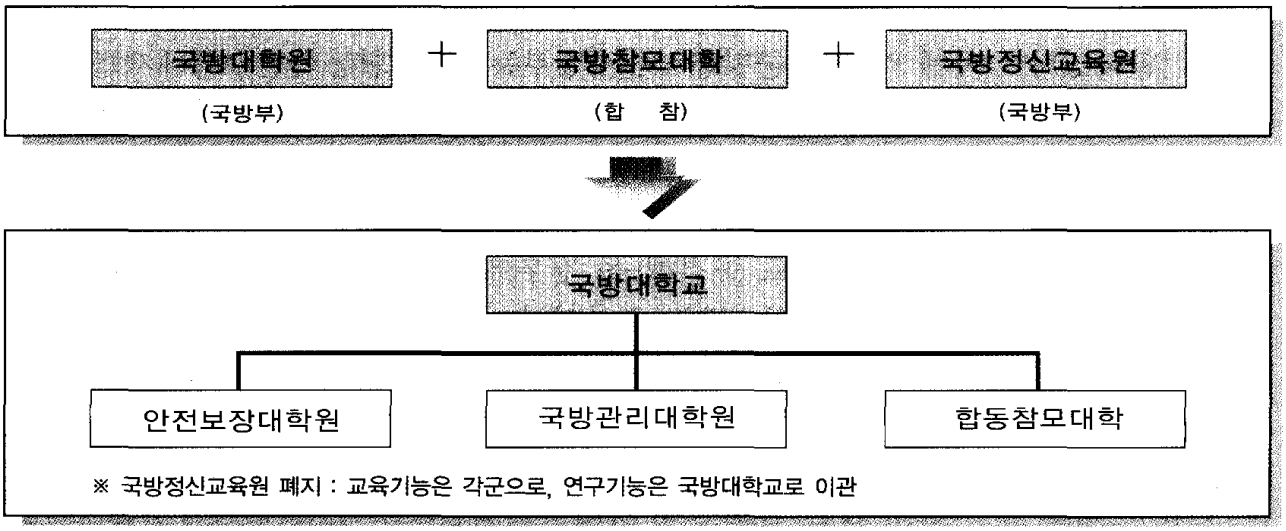
통합(1998. 12)하여 인력과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유사 · 공통기능 통 · 폐합의 일환으로 국방정보체계의 다원화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정보수집부대의 기술분야 전문요원을 신호, 인간, 영상정보 등 기능별로 개편(1999. 4)하였다. 또한 환자의 긴급 후송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군 내에 '항공의무 후송부대'를 창설하였다.

국방부 산하의 4개 연구기관은 연구기능이 미약한 국방품질관리연구소를 비연구기관으로 전환하고 정보체계연구소의 기술분야 전문요원을 국방과학연구소에 통합함으로써 정책연구 중심의 국방연구원과 무기 · 정보체계 개발 연구 중심의 국방과학연구소의 2대 기관으로 재편(1999. 1)하였다.

또한 학교기관 중 국방대학원 · 국방참모대학 · 국방정신교육원은 각 기관의 교육목적과 특성을 유지하면서 안보관련 종합대학 형태인 국방대학교로 통합(2000. 1)되었다.

[도표 4-2] 국방대학교 창설



제2절 목표 지향적이며 투명한 방위력 개선

방위력개선은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과감히 개편하고 각종 제도를 혁신하였다.

조직개편은 각 기능별로 과도하게 분산되어 있던 획득개발 관련조직을 정리하여 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획득실을 신설하였고 방위력 개선사업과 관련된 업무수행을 기존의 기능별 조직에서, 과정(Process)중심의 통합사업관리 조직으로 전환시켰다.

이에 따라 무기체계 및 비무기체계의 획득업무가 통합되어 책임제 관리체제로 개편되었으며, 분석 · 평가기능을 강화하여 주요의사 결정시에는 비용분석 및 심사평가를 의무화하는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아울러 획득실은 장관의 명을 받아 조달본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품질관리소의 업무수행을 지휘 · 감독 및 통제하게 됨으로써 국방정책에 부합되도록 집행업무를 지휘감독하고, 부서간의 협조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업무를 조정 · 통제하게 되었다.

획득제도의 제반 절차를 혁신하기 위해 8개 협의체 위주의 획득의사결정체계를 과감히 축소 · 폐지하여 3단계로 간소화시켰으며, 17개의 획득관련 법규를 1개로 통 · 폐합하고, 획득절차도 38단계에서 24단계로 단축하였다. 또한 정책의 책임과 권한은 집중하되 집행은 각 군과 기관에 위임하고 사업관리, 시험평가, 기종결정, 계약단계 등에 '사업실명제'를 도입하였다.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고 정비 · 인력 · 기술면에서 민수분야와 호환성이 없는 분야는 전담체계화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첨단산업기술을 보유한 중소 · 벤처기업의 방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계열화 업체의 76%를 경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방산사업의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미래전 양상과 불확실한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첨단무기체계 개발에 필요한 독자적인 핵심기술 확보가 요구됨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를 첨단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연구소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관련부처간의 공동연구 및 자료 공유를 위해 민 · 군 겸용 기술센터를 설치하였으며, 15개 첨단무기체계와 관련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독자적인 개발능력을 갖추도록 추진하고 있다.

제3절 합리적인 인사·교육제도 개선

1. 인사·교육관리 개선

인사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직 및 진급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인사관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시켰다.

보직관리제도는 주요 직위별 보직자격 기준을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개인별 자력과 연계시켜 보직을 관리하도록 개선하였으며, 2000년 말까지는 중령급 이하 장교까지 이를 확대하여 전산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급별, 단계별 보직관리체계를 설정하여 종전에는 지휘관 직위에만 적용하던 사전 보직예고제를 중령급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진급관리제도는 진급공석 결정시 공개적인 정책회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진급공석 결정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진급심사의 세부평가 기준을 계량화하여 2000년 진급심사부터 적용토록 하였다. 1999년 3월에는 인사법을 개정하여 장교의 진급 최저 근속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소령이하 장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고, 상위계급 장교의 정체기간을 단축시켰다. 또한 임기제 진급제도를 중·대령에게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명예진급제도는 소령부터 시행토록 하여 초과인력을 해소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교육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양성과정으로부터 초·고군반, 각군대학, 국방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각 과정별 교육목표 및 중점을 재정립하였다. 국방대학교에는 안전보장대학원, 국방관리대학원, 합동참모대학 및 직무연수부와 부설연구기관인 안보문제연구소 및 합동교리발전부를 두어 국가안보정책 전문가 교육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첨단 과학기술의 신속한 도입 및 활용을 위해서 군내에서 운영하는 석사과정 중 국방대학교 석사과정은 군·학 제휴를 통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사과학대학원의 석사과정은 민간대학 위탁교육으로 전환하고 이를 폐지하였다.

2. 하사관 종합발전계획 추진

현재와 미래의 전장환경에 부합되고 군 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사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군 하부구조를 강화시키기 위한 하사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장교는 전투준비태세 유지에 전념토록 하고, 하사관은 병 지휘·통솔 및 신상관리, 내무교육, 병 주특기 훈련 및 측정, 병영생활, 의식주 문제, 사고예방활동, 보급, 시설 및 재난관리 등에 전담토록 하여 하사관의 역할 및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구

분하였다.

하사관 획득제도를 개선하여 병과별로 체력 및 적성 등 선발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전문대·기능대 장학생 확대모집을 통한 하사관의 자질향상과 안정적 인력확보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양성 및 보수교육체제를 개선하고 민간대학 위탁교육을 확대함으로써 하사관의 전문대 이상 학위수준을 현 6%에서 11%로 상향 설정하였으며, 고급제대의 참모업무까지 하사관이 수행하도록 편제직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하사관의 권위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현재 사용되는 장교 예속개념의 하사관(下士官) 명칭을 '부사관'(副士官)으로 바꾸기 위한 관계법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제4절 국방관리의 혁신

1. 미래전에 대비한 국방정보화체계 기반 구축

국방정보화의 추진목표는 2015년까지 정보전 수행능력을 갖춘 '정예 정보화 군' 육성에 있다.

[도표 4-3] 국방정보화 추진목표

1단계(1999~2005)	2단계(2006~2010)	3단계(2011~2015)
기반완성/핵심체계 구축	기능확장/체계통합	선진정보체계 완성, 정예 정보화군 달성

국방부는 정보화기획관실을 획득실에서 분리하여 차관직속 기구로 개편(2000. 4)하고 국방정보화 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할 총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정보화기획관을 민간전문가로 영입하여 최신 전문지식을 국방업무에 반영하고 있다.

▲ 인터넷 면회소(면회 장면)

이에 따라 국방정보체계의 기획·계획, 예산·집행·평가업무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국방표준 및 상호 운용성 평가, S/W관리, 정보보호 등 내실 있는 정보화 발전을 이루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기 개발된 정보체계와 개발 예정인 정보체계의 관리, 운용유지 및 개선에 관한 체제를 정비하고, 국방업무 정보화를 추진할 관리자들에게 정보기술을 이용해 업무절차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 · 여단급에 정보화 교육장, 대대급에 인터넷 교육장 및 인터넷 면회소, 중대에 PC방을 설치하여 국가정보화 인력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방정보체계 형상관리, 보안체계 개선 등 단계적인 국방정보화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2. 군수조달의 투명성 · 경쟁력 확보

군수조달은 조달 절차상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참여하는 업체나 기관이 자유경쟁에 의하여 선정되도록 경쟁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규제 성격의 군납업체 등록제도와 업체실태 조사제도를 폐지하였고, 군납 안전진단의 대상업체 및 품목을 1,235개에서 361개로 대폭 축소함으로써 자유경쟁 원칙하에서 많은 민간업체들이 군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조달관련 정보도 조달본부 종합상담실에만 비치하여 오던 것을 인터넷 '조달 홈페이지(www.dpa.go.kr)'를 개설하여 군납 희망 업체들이 손쉽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군 전용품 조달의 전문화를 위하여 일반상용물자 구매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중에 있는바, 2000년에는 740개 품목을 이미 이관하였으며, 미 이관된 126개 품목은 경제성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또한 물자구매시 계약부서와 담당자를 명시하고 동시에 계약서 보관기간을 장비폐기시까지 연장하는 실명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한 업체나 낙찰금액 및 낙찰자 결정과정 등 각종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3. 효율적인 군수지원체제 구축

민간자원이 풍부한 군수품에 대해서는 군 보유수준을 최소화한다는 방침하에, 군 표준장비 중에서 대체 가능한 520개 품목을 상용장비로 편제에 반영하고, 치장중인 수송 및 건설장비 3,564대를 전시동원으로 전환시킴으로써 799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 또한 전시동원물자 중에서 3,929개 품목의 규격을 완화함으로써 물자동원능력을 향상시켰고, 전시에 군수품으로 활용 가능한 365개 품목을 민수품으로 대체함으로써 초전소요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보급 · 정비 · 수송분야의 민간위탁 및 민영화 방안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시험적용을 거쳐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신속한 군수지원을 위하여 '국방CALS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급수준 하향조정, 수송기간 단축 및 수평 분배 등 물류체계 혁신방안의 시행을 준비중에 있다.

제5절 군 사법제도 개선

군 사법정의와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군 사법조직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였다.

재판기관과 검찰기관을 분리하고 재판의 공정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판 및 검찰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국방부법무운영단을 해체하여 고등군사법원과 국방부검찰단으로 분리 · 창설하고, 각군본부 군사법원을 독립 · 창설하였다(2000. 7). 고등군사법원에 재판연구부를 신설하여 판례분석 등 군사법 제분야의 연구를 담당하도록 하고, 국방부검찰단은 병역비리 등 각종 구조적 · 조직적 비리의 철저한 수사를 위해 특수부를 설치했다. 또한 고등군사법원과 각군본부에 국선변호부를 설치하고, 군사법원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풀(Pool)제 운영을 통해 장병의 권리보호를 충실히 하고 사선변호인 선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국방부장관의 설치보류해제명령에 의해 사단급부대에 50개의 보통군사법원을 추가 설치(2000. 6)함으로써 영장청구 및 재판시 장거리 이동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시켰다. 이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전시에는 원활한 군사법원의 운영을 가능하게 하였다. 아울러 즉결심판제도를 도입(2000. 5)하여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에 의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군 경험이 풍부한 예비역 군법무관을 군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법무관이 공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부득이 하게 전역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법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군법무관의 해외위탁교육을 확대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으며, 군법무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현재 격년제로 40~50명을 선발하고 있는 군법무관임용시험을 개선하여 25명 정도씩 매년 선발할 계획이다.

제6절 신 병영문화 창달

신병영문화 창달의 기본 목적은 전투위주의 사고와 가치관으로 무장한 강한 전투원을 양성함으로써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육성하는 데 있다.

군은 병영문화 창달을 위한 세부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째, 병영생활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표준일과표 및 주간시간 운영방식을 개선하였다. 일과시간에는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실시하되, 그 외 시간에는 병사들이 자율적으로 PC, 영어 및 한자학습 등 자기계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석 점호 방식을 내무사열식 형태로부터 인원 및 건강상태의 확인 위주로 개선하였다.

둘째, 부대운영 측면에서는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간부들이 오직 전투임무 위주로 '생각하고, 준비하고, 훈련'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형식적인 각종 보고 및 검열, 지도방문 등을 과감하게 축소하여 전투임무에 전 역량을 집중토록 하였으며, 야전군 작전의 승패를 결정짓는 사(여)단급 부대의 지휘관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하여 지휘관이 책임지고 부대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실무경험이 부족한 초급간부들이 야전 실무현장에서 겪게 될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과 행동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실무지침서' 를 보급하여 초급간부들이 합리적으로 부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중장기적으로 병영시설 및 각종제도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개인의 정서적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병영환경을 조성하고 병역의무 수행을 보다 의욕적이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신 병영문화 창달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첫째, 병영생활이 '수용' 개념에서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수련장' 의 개념으로 변화되고, 둘째, 간부들은 오직 전투력 향상을 위해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부대관리에 있어 과학적 기법과 전문성을 구비하게 되어 부대운영에 자신감을 견지하게 될 것이며, 넷째, 자율형 병영문화에 부합하도록 여러 가지 병영환경과 여건, 제도 등을 개선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되고 의욕과 희망을 북돋우는 병영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제3장 향후 추진계획

제1절 중·단기 개혁 지속추진

1. 군 구조 개편

군 구조 분야는 통일 후에 대비한 미래 군 구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합참 및 각군본부와 군사혁신기획단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연구중에 있다.

이를 위해 미래 안보상황 및 위협 분석, 군사전략과 군사력 운용에 대한 선행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기초로 미래 불특정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정 군사력 수준과 부대구조를 연구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국방부 및 합참의 기획문서에 반영하고 구체화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남북상황 변화시 큰 혼란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방개혁과제로 육군이 추진해 오던 '전방 2개 야전군사령부 해체 및 지상작전사령부 창설'과 '후방 2개 군단 해체 및 후방작전사령부 창설계획'도 미래 군 구조 연구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의무부대 개편은 우선 5단계의 의무지원체계를 3단계로 축소하여 장병들의 의료혜택을 개선하였다. 아울러 후송체계 및 의료시설은 개선하면서 불필요한 병상 수는 줄여 나갈 계획으로 18개의 전·후방 병원 수를 2004년까지 16개로, 7,400개의 병상 수를 2009년까지 6,000개로 연차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국군체육부대의 해체 여부는 2002년 월드컵 등과 같은 국가적 체육행사와 세계군인 체육대회(CISM)를 고려하여 2000년 후반기에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1999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대신 민간 간호인력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아울러 국방분야에 여성 참여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여군장교 및 하사관 양성과 보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육군여군학교는 2001년에 해체하여 장교는 3사관학교에서, 하사관은 하사관학교에서 각각 양성하고 보수교육은 해당 병과학교에서 실시하도록 할 것이다.

2. 신 병영문화 창달

정보화, 과학화로 대변되는 미래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병사 개개인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복잡하고 다양한 미래 전투상황은 장병 개인의 판단력과 전

문성을 더욱 요구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신병영문화 창달'은 장병 개개인이 보다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병영문화를 개선함으로써 판단력과 창의력, 자발성을 계발시키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즉각 시행이 가능한 단기과제는 2000년부터 바로 시행하고 있으며, 시험적용 및 보완이 필요한 중기과제는 면밀히 검토한 뒤 2000년 하반기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 소요 및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장기과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병영문화 개선은 강군 육성에 그 의미가 있으므로 상급부대는 통제나 간섭보다는 예하 부대가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발적으로 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 주는데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제2절 국방정보화 추진

국방정보화는 2015년까지 미래정보전/체계통합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정예 정보화/과학군을 육성하고, 발전된 C4I체계를 중심으로 전력운용의 동시성과 통합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국방자원관리의 자동화 및 정보화 환경구축으로 전·평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미래 정보전에 대비하여 정보화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국방업무 전반에 걸친 정보화를 가속화 할 예정이다.

전력분야의 정보화는 전쟁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 자동화지휘체계(C4I체계)에 집중할 것이다. 우선, 국방정보화를 추진할 국방부 차원의 총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관련기관/부서의 조직과 기능을 정비하고, 정보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도록 관련 제도 및 절차를 발전시켜 효율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한다.

통신기반체계는 추진중인 국가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적극 활용하고, 전시 생존성 및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술통제망, 위성망, 데이터링크(Data-Link) 구축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종합적인 계획하에 C4I 및 자원관리체계의 전력화 시기가 일치하도록 추진하고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한다.

자원관리 분야의 정보화는 효율적인 군 운영을 위한 통합자원관리체계 및 지식기반 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며, CALS체계, 각 분야별 자원관리, 국방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구축에 역점을 둔다. 또한 목표지향적이고 통합지향

적인 사업관리와 점진적 · 단계적 사업추진 풍토를 조성하고 업무절차개선(BPR)을 통하여 사용자 요구에 부응한 실용성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정보화 인력양성은 전 장병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군복무기간 중 군 정보화에 기여하고 전역 후 국가정보화 역군으로 활동하도록 육성할 것이다. 아울러 국방정보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리자에 대한 정보화 교육과 대내외 전문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제반 제도 및 절차와 조직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조기에 정보화 군을 건설하도록 매진할 것이다.

제3절 국방연구개발 혁신

국방과학기술 능력은 군사력의 핵심 기반이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는 군사력의 양적 규모보다는 첨단기술 위주의 질적 능력에 의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자적인 국방과학기술 능력의 확보가 긴요하다. 첨단전력의 해외 도입은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의 기술이전 규제 및 통제도 더욱 심화되어 한계가 있다.

우리는 1970년대 이후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국방과학기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현실은 대부분의 주요 장비와 부품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등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핵심기술의 수준도 매우 낮은 상태이다. 이는 이제까지의 전력증강 방식이 해외구매 및 기술도입 조립생산에 중점을 두어 온데 기인한다.

이제 정보화시대의 전쟁패러다임이 발전됨에 따라 군사력 건설의 개념도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즉 전력발전의 개념을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환시킬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 체계를 근원적으로 혁신하여 선진국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국방과학기술 능력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다.

국방 연구개발 혁신은 미래 첨단기술의 확보와 방위산업 기반의 강화에 주안을 두고 제반 체계와 제도 및 절차를 재 설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혁신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국가 과학기술 전략과 연계하여 선진 국방과학기술 기반을 구축한다. 둘째, 미래 첨단핵심기술을 선별하여 중점 발전시킨다. 셋째, 일부 주요 핵심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일류화한다. 넷째, 비교우위의 민간 첨단기술을 과감하게 활용한다. 다섯째, 국제경쟁력을 가지도록 방위산업을 발전시킨다.

이러한 과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사혁신기획단'에 '연구개발혁신팀'을 새로이 구성(2000. 5)하였으며, 앞으로 국방연구개발과 방산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발전시켜 정책화 · 계획화할 예정이다.

제4절 미래전에 대비한 군사혁신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21세기의 전쟁 패러다임을 산업화시대의 대량파괴전 양상에서 정보화시대의 정밀타격 · 정보마비전 양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미래전의 모습은 걸프전과 코소보전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미래에는 정밀유도무기, 스텔스 운반체계, 센서체계, 컴퓨터와 통신 네트워크 등의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됨에 따라 전장가시화 및 정보공유능력이 발전되고, 전장공간이 기존의 지 · 해 · 공 3차원에서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확대되며, 장거리 정밀교전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특히 정보체계를 보호 · 마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전쟁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새로운 군사혁신이 추구되고 있다. 군사혁신은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전력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전운영개념과 조직편성을 혁신하여 전투능력을 극적으로 증폭시키는 현상이다. 미국은 정보통신 · 로봇 · 미세전자기계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정보 · 지식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 발전시키고 있다. 육군의 디지털전장(Digitization), '해군의 협동교전능력(CEC: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 '공군의 지구적 교전(Global Engagement)' 등이 대표적인 군사혁신 개념이며, 이들은 모두 전장의 모든 센서와 정밀타격체계를 네트워크체계로 결합시켜 전장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전투력의 동시통합 효과를 최대한 확대하고 전투의사결정 사이클을 신속하게 회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 군도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안보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전쟁양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1999년 4월 '국방개혁추진위원회' 산하에 '군사혁신기획단'을 설치하였다. 군사혁신의 목표는 정보 · 지식기반의 국방력을 창출하여 21세기의 생존 · 번영 · 통일을 보장하고 정보화시대의 국방발전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것이며, 다음 네 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

'군사혁신기획단'은 이러한 방향에 기초하여 한국의 안보상황과 국방여건에 걸맞는 군사혁신의 개념과 방안을 3단계에 걸쳐 연구 · 개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20~30년 후의 미래 안보환경과 국가발전추세를 분석하여 국방전략을 도출하고, 우리

· 중 · 장기 국가발전 비전과 계획에 부합된 군사혁신 비전 및 개념 설정
· 핵심적인 군사혁신 과업 및 과제에 역점을 둔 구현방책 개발
· 미래 과학기술 발전추세를 예측하여 시대를 앞서가는 군사기술혁신 추구
· 비교우위의 사회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강력한 국방력 창출

군에 적합한 전장운영/군사교리, 군사기술 · 전력체계, 운영체계, 리더십 · 교육훈련 등의 제 분야에 대한 기본개념과 방향을 정립하였다. 2000년에는 이러한 기본개념과 방향에 입각하여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구체적 방안을 개발하고, 2001년에는 이를 정책화 · 계획화하여 다음의 국방기본정책서 등 장기 기획문서와 국방개혁 과제에 반영할 예정이다.

여 백

제5부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

제1장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 구현
제2장 국민의 편익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

여 백

제1장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 구현

제1절 공정한 병무행정 실현을 위한 노력

1. 올바른 병역문화 정립을 위한 제도 발전

병역 이행이 의무이면서 동시에 영광으로 인식되는 병역문화의 정립은 오늘날 병무행정이 실현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국민 개개인이 병역의무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병무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정보 공개 · 공유를 통한 투명성 확보, 고객지향 서비스 행정구현, 경쟁력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병역문화를 정립하기 위하여 병무행정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가. 병역처분기준의 합리적 설정

병역처분기준은 개개인의 병역 복무형태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이 기준은 당해연도 전체 징병검사 수검자의 신체등위와 학력 수준을 기본요소로 하고, 군의 소요와

[도표 5-1] 학력 및 신체등위에 의한 병역처분기준

<table>
<tr><th>신체등위 / 학 력</th><th>1급</th><th>2급</th><th>3급</th><th>4급</th><th>5급</th><th>6급</th><th>7급</th></tr>
<tr><td>대학</td><td colspan="4" rowspan="2">현 역</td><td rowspan="4"></td><td rowspan="4">병 역
면 제</td><td rowspan="4">재검사
대 상</td></tr>
<tr><td>고졸</td></tr>
<tr><td>고퇴</td><td colspan="4" rowspan="2">보 충 역</td></tr>
<tr><td>중졸</td></tr>
<tr><td>중학중퇴이하</td><td colspan="5">제 2 국 민 역</td></tr>
</table>

[도표 5-2] 신체등위와 관계없이 병역이 감면되는 사유

대 상 (사 유)	병역처분
• 부 · 모 또는 형제 · 자매중 전몰군경 ·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 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	보충역 (공익근무요원 6개월 복무)
• 6월 이상 1년 6월 미만 실형 선고자 • 1년 이상 수형자중 집행유예 선고자	보충역 (공익근무요원 28개월 복무)
• 1년 6월 이상 실형 선고자 • 중학중퇴 이하자 • 고아, 귀화자, 혼혈아 • 신체등위 7급사유 1년 초과자	제2국민역 (전시근로소집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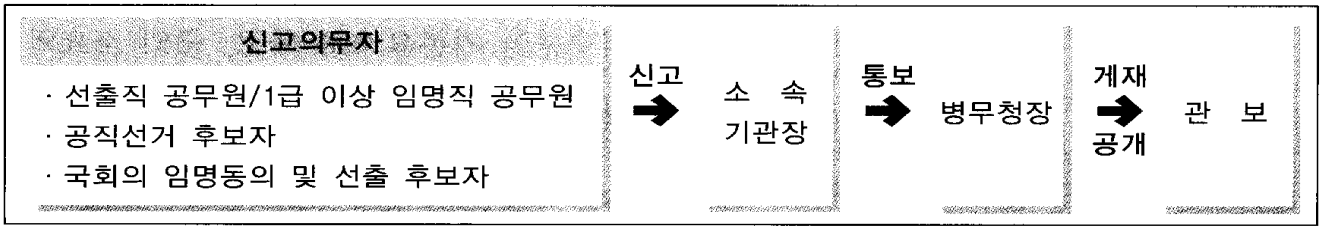
병역자원 증감 등의 제 요인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결정된다. 2000년에 징병검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기준은 도표 5-1, 5-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나. 병역실명제도의 시행

병무청은 선출직 공무원 및 고위공직자와 그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사항의 신고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을 1999년 5월 24일자로 제정·시행하고 있다.

신고의무자는 해당 지위를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인 및 18세 이상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병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병무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병무청장은 신고기관의 통보내용을 종합하여 신고내용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 공개하게 된다. 한편 최초 신고 이후 병역사항이 변동된 때에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정기변동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공개절차는 도표 5-3과 같다. 다만 공직선거후보자와 국회의 임명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장이 각각 공개하게 된다.

[도표 5-3]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절차



이와 관련하여 1999년 10월 29일에는 동법에서 정한 6,000여개의 공개대상직위 중 신고의무자 5,885명과 그 직계비속 6,789명 등 총 12,674명의 병역사항이 최초로 공개되었으며, 2000년 9월까지 총 13,965명(직계비속 7,413명 포함)이 공개되었다.

다. 징병전담의사 제도의 시행

지금까지 현역신분의 군의관에 의하여 실시되었던 징병신체검사는 1999년부터 징병전담의사 제도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 징병전담의사는 현역군의관으로 임관되지 않은 전문의사 중에서 선발되어 병무청 소속의 계약직 공무원 신분으로 3년간 계속 근무하면서 징병신체검사를 전담하게 된다.

현재 전국 11개 징병검사반에 소요되는 전담의사는 111명이나, 2000년까지 7개 검사반에 71명을 배치 운용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전원 전담의사로 장병신체검

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라. 내실 있는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운영

병무청 내에 설치된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서는 신체등위판정과 관련되는 제도개선과 질의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각 지방병무청 내에 설치된 동 위원회에서는 개별 병역처분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다.

지방병무청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신체검사결과 5, 6급 판정대상자와 신체검사결과 합격자로서 판정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자 등이다. 위원회의 판정은 심의위원 전원합의에 의하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 병원의 정밀검사를 받게 한다.

또한 심의대상자의 가족에게 심의판정과정 전반을 공개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필요시에는 병역의무자 가족대표, 병무행정설명회 참관인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심의의 공신력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2000년부터는 '가정의'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

1999년도에는 면제대상자 12,784명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12,558명을 합의판정하였으며, 226명은 군 병원에 정밀신체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마. 대체복무제도의 합리적 조정

대체복무제도는 병역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국가 사회에의 기여도를 높인다는 데서 그 효용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복무형태와 복무분야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우선 공익근무요원 대상자중 학력이 높은 사람을 먼저 소집하기 위하여 종전의 ① 징병검사연도가 빠른 순 ②나이가 많은 순으로 되어 있던 소집순서를 ①학력이 높은 순 ②징병검사연도가 빠른 순 ③나이가 많은 순으로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집대상자 적체지역에서 저학력자가 먼저 소집되고 고학력자가 소집되지 않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사고빈발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 소집순서 후순위제도를 신설, 고졸이하 학력자 중 집행유예자를 포함한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병역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자는 제외), 소년원 재원 사실이 있는 사람, 정신질환자, 문신 또는 자해 및 반흔 사유로 신체등위 4급인 사람에 대하여는 소집순서를 후순위로 조정하였다.

아울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였다.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이 편입당시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였던 것을, 위반내용이 고의성이 없거나 지정업체장의 부당한 직무명령에 의한 경우 등 사안이 경미한 때에는 편입취소 대신 그 위반기간만큼 연장 복무토록 하였다.

[도표 5-4]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별 운영규모 (2000년도)

계	행정관서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55,257(명)	12,513	35,742	5,544	1,253	101	104
비율(%)	22.6	64.7	10.0	2.3	0.2	0.2

또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10년 이상된 연구기관과 8년 이상된 공업분야의 지정업체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을 제한하게 된다. 이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비하여 신규 병역지정업체는 계속 늘어나고,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육성정책에 따라 지원인원은 증가하고 있어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도표 5-5]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및 관리인원 현황 (2000년도)

구분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개)	13,414	2,395	11,019
관리인원(명)	70,231	14,675	55,556

바. 병무행정의 대국민 서비스 강화

병무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는 병무행정 전반에 관하여 45개 분야 360여종의 병무행정 정보가 체계적으로 분류, 수록되어 있다. 특히, '인터넷 민원실'에서는 민원 상담 및 국민제안은 물론, 신문고, 부조리신고센터 등 각종 신고사항을 접수받고 있으며 병역의무자 개개인의 입영일자와 민원처리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응답전화기(ARS)를 통하여 입영일자, 지원병 모집,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등 92종류의 병무행정에 관한 문의사항을 24시간 연중 무휴로 안내하고 있다.

또한 모든 징병검사장을 전면 개방하고 설명회를 열어 병역처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으며, 특히 매 학기초에는 각급 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신입생을 위한 병무행정 설명회를 열고 있다. 한편 학기 중에는 학교별로 이동병무상담소를 설치하여 순회상담을 실시하는 등 병역의무자와 직접 접촉을 통한 안내활동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신문·방송 등 보도매체에 고정적으로 지면과 시간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상담 및 안내를 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쇄물을 통한 안내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17세 이전에 외국에 조기 유학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교육부장관의 국외유학인정서 또는 유학특례확인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국외여행을 허가하여 왔으나 이러한 제한을 1999년 부터 폐지하여 조기유학자라 하더라도 일반 유학생과 같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2년 단위로 되어 있던 유학생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졸업 예정시까지 연장하였으며, 군복무필자 및 면제자(제2국민역)가 국외출국시 공 · 항만에 있는 병무신고사무소에서의 출국신고는 폐지하였다.

그리고 거주지 시 · 군 · 구의 징병검사가 시작되기 전에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거나 빨리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기를 원하는 등의 이유로 우선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희망하는 징병검사 전일까지 '우선징병검사원서'를 제출하면 원하는 일자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병무행정의 혁신 : '병무행정 Vision 21' 추진

병무청은 공정한 병무행정과 효율적인 자원관리 및 양질의 자원 충원 등 새 천년 새로운 병역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병무행정 Vision 21' 계획을 수립하여 병무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하고 신 정보화시스템을 개발하여 선진화된 병무행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00년에는 징 · 소집분야 신 정보화시스템을 개발하고 2001년에는 예비군분야와 의사결정지원 및 행정평가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200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가. 추진실적

2000년 1월부터는 '전자우편처리센터'를 통하여 징병검사통지서 및 병력동원소집통지서 등을 자동발송 처리함으로써 통지서 발송에 따른 업무량을 단축시켰다.

2000년 3월 1일부터는 지방병무청에서 발급하던 병적증명서를 시 · 군 · 구, 읍 · 면 · 동에서도 팩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2000년 5월 1일부터는 '민원처리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처리 전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향후계획

2001년부터는 징병검사 전과정을 완전 전산화함으로써 징병검사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병역비리를 차단할 계획이다. 병역의무자가 지방병무청 또는 시 · 군 · 구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입영기일연기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연기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게 된다. 그리고 대학재학생의 경우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입영일자 및 부대별 잔류인원을 확인하여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 전문연구요원(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는 지정업체, 지역예비군 중대 및 각급 대학 등과 인터넷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며, 현재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법무부와 자료협조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 전산망을 각군을 비롯한 교육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병무청 및 군 병원으로 이원화되어 실시되고 있는 신체검사를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를 설치하여 일원화하여 병역판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병역면제 판정에 대한 2심제를 운영함으로써 병역비리를 근절할 계획이다.

제2절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노력

1. 정보공개와 국방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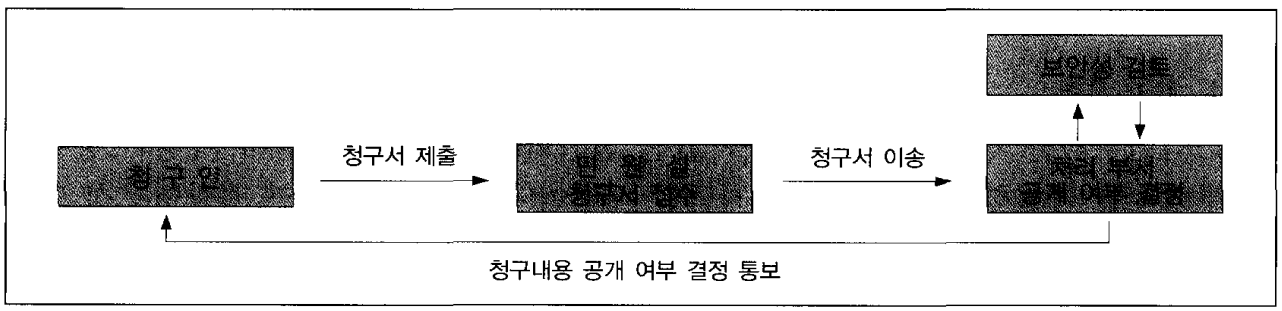
가. 정보공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방부도 정보공개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방부 및 각 산하기관은 기관별로 정보공개 창구를 마련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선하여 군사기밀이 아닌 사항과 주요사업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정보 또한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하고 있다.

국민은 각 기관의 정보공개 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공개편람 및 주요 문서목록 등의 각종 정보를 열람하여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담당

[도표 5-6] 정보공개 처리 절차



부서는 15일 이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 통지하고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청구인의 이의 신청에 대하여 국방부 및 산하기관은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며, 기각 또는 각하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서를 함께 통지하게 된다.

나. 국방민원

국방부는 국방민원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국방부 대표전화 (02) 748-1111 및 민원실 전화 (02)748-6891~6892를 공개하여 민원을 상담하고 있으며, 국방신고센타(02)748-5959를 설치하여 국방정책 발전에 대한 건의, 군내 구타사고 및 각종 비리 등을 제보 받아 처리하고 있다. 또한 일과종료 후에는 민원실 전화를 자동녹음 전화로 전환하여 24시간 민원을 접수하고 있으며 자동 녹음된 민원은 일과개시 즉시 처리사항을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있다.

[도표 5-7] 민원처리현황 (1999. 12. 31. 기준)

서류민원	인터넷민원	방문상담	전화상담
연 3,899건	연 5,920건	연 2,658건	1일 평균 110건

서류민원 중 전공상 및 상훈복지 요구민원이 가장 많은 비중(34%)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터넷민원은 젊은 세대의 군입대 및 군무원 모집 관련 문의 등 단순질의가 5,539건(94%), 진정성 민원은 381건(6%)을 차지하고 있다.

2. 열린 국방과 국방홍보

국방부는 국방정책 추진사항을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하고 각계 각층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열린 국방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기적인 '일일 프레스 브리핑'을 실시하고 '국방일보', '국군방송', '국방소식' 등 군 홍보매체를 통해 주요 국방정책 추진상황 및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 등 국민적 관심사항을 적시에 알리고 있다.

2000년 3월부터는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선하여 국민과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국방부 각 부서별 홈페이지란을 신설하고 각군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민원사항이 관련 국 · 실과 각군에서 직접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 해병대 캠프

각종 군사자료는 물론 군가, 군영화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자료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각종 여론조사, 열린게시판, E-mail 클럽, PC통신 등의 여러 경로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여 국방정책 수립시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연간 15만 여명에 달하는 청소년 호국수련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병대캠프를 비롯한 각종 병영체험 및 부대 개방행사, 호국문예작품 공모 등을 통해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상무정신을 고취시키고 있다.

제3절 6 · 25전쟁과 국방

1. 6 · 25전쟁의 의의와 역사적 교훈

6 · 25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이 세계 공산화를 위한 팽창주의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한 시점에서,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 하에 1950년 6월 25일 기습적으로 38선을 남침한 것을 국군과 유엔군이 유엔의 깃발 아래 공산세력의 세계적화 의도를 저지한 최초의 전쟁으로 자유민주주의 승리를 대표하는 세계자유수호전쟁이었다. 이때에 유엔군으로는 미국 등 16개국이 전투부대를, 인도 등 5개국이 의료지원부대를 파견하였고, 20여 개 국가가 물자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6 · 25전쟁은 전쟁 기간 중 400만여 명의 인명피해, 1,000만여 명의 이산가족, 230억불의 재산피해 등이 발생함으로써 인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고, 전쟁발발 50주년이 되는 오늘까지 민족분단을 고착화시킨 원인이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안보 현실을 이해하고, 6 · 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상기하여 이 땅에 다시는 6 · 25전쟁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6 · 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

6 · 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목적은 ①6 · 25전쟁의 의의와 교훈을 계승시키고, ②노령화된 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복지시책을 확대하며, ③전후세대에게 호

국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④참전 21개국과 유대강화 및 국가 신인도를 제고시킴으로써 21세기 민족의 화해 · 통일 ·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다. 6 · 25전쟁 발발과 휴전협정 조인 각각 50주년이 되는 2000년 6월 25일부터 2003년 7월 27일까지 계속될 이 기념사업은 '전쟁을 넘어 평화로, 분단을 넘어 통일로' 라는 주제로 52개의 정부 부 · 처 기본사업과 41개의 위임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중앙기념행사 등 39개 기본사업과 36개의 위임사업을 추진하였다.

가. 6 · 25전쟁의 의의와 역사적 교훈 계승사업

6 · 25전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호국안보의식을 고양하고 6 · 25전쟁의 의의와 역사적 교훈을 후세에게 계승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하여 6 · 25전쟁사 중에서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분야는 학술적으로 재정립하고, 미 정립된 군사분야 16개 과제와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비군사분야 13개 과제 등 총 29개 과제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6 · 25전쟁사 부록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0년 4월에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국내 · 외 학자가 참가하여 '6 · 25전쟁과 한반도 평화' 를 주제로 국방학술회의를, 6월에는 한국, 미국, 일본 등 학자가 참가하여 '한국전쟁 이후 50년, 냉전적 대립에서 평화 공존으로' 란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6 · 25전쟁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였다.

또한, 선열들의 호국 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6 · 25전쟁 50주년 상징조형물' 을 전쟁기념관에 건립할 예정이고 전국 667개소의 전쟁관련 전적지를 지속적으로 정비 · 정화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관광 명소화하여 많은 국민들이 둘러볼 수 있도록 지역관광지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

▲ 국방 학술회의

나. 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복지시책 확대

6 · 25전쟁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헌신한 참전용사 및 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참전에 대한 명예와 자긍심을 고양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 참전용사의 호국헌신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대통령 명의의 감사서한을 발송(2000. 6)하였으며, 태극무공훈장 수훈자 및 유족 53명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감사선물을 전달하였다. 또한 지역 · 마을 · 학교별로 참전용사

명예선양을 위하여 마을별 전사자 명비 제작, 도로 표지판에 참전무공수훈자 이름 넣기, 참전용사의 집 문패 달기, 참전용사 명예졸업장 수여, 무공수훈자 및 호국인물 흉상제작 등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지역별로 참전용사 위로방문 및 초청행사, 전상자 위로방문, 참전전우 찾기, 전쟁영웅 현양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누란의 위기에 처한 국가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산화한 호국영령 중 미처 수습하지 못한 유해를 유가족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하여 주요격전지인 다부동, 안강 등 29개소를 대상으로 유해발굴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00년 전반기에는 다부동, 안강, 개화산 지역에서 전신유해 41구, 부분유해 1,410점, 유류품 2,361점을 발굴하여 이 중 아군유해 144구는 국립묘지 납골당에 안치하고 신원 확인된 유해 2구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였으며, 미군유해 1구는 미국에 인계하고, 북한군 유해 2구는 파주 북한군 묘지에 안장하였다. 후반기에는 금성, 백석산, 피의 능선, 충주 등의 지역에서 유해발굴을 실시중에 있다.

▲ 유해 발굴

한편, 국가보훈처에서는 참전용사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기본연금 인상과 상이등급을 확대하여 시행중이다. 또한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생계곤란 고령 참전군인에 대한 생계보조비 추가지원, 안장지원, 장제보조비 지급 및 의료수혜범위 확대 등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전후세대의 국가관 확립 및 호국안보의식 고취

국민의 70%가 넘는 전후세대에게 6 · 25전쟁의 의의와 역사적 교훈을 생생하게 전달하여 호국안보의식과 국가관을 확립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하여 초 · 중 · 고교 교과과정에 관련내용이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2000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과정을 개편하여 교육하도록 하였으며 연차계획에 의거 2004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 교과과정까지 확대하여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병 및 예비군, 전국 초 · 중 · 고교, 각종 연수기관에 6 · 25전쟁 관련 교육용포스터 및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 · 배포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참전수기 및 호국문예작품을 공모하여 '당신은 아름답습니다'라는 문예물을

발간(2000. 6)하였으며, 6 · 25전쟁 순회사진전시회를 서울 등 11개 지역에서 실시하였다. 그리고 보이스카우트연맹 단원 200여명이 애기봉-휴전선 일대-통일전망대를 잇는 '통일을 위한 행진'을 실시하는 등 각종 수련회 및 연수원 교육, 장병 및 예비군 정신교육, 자유수호웅변대회 등을 실시하여 전후세대들에게 호국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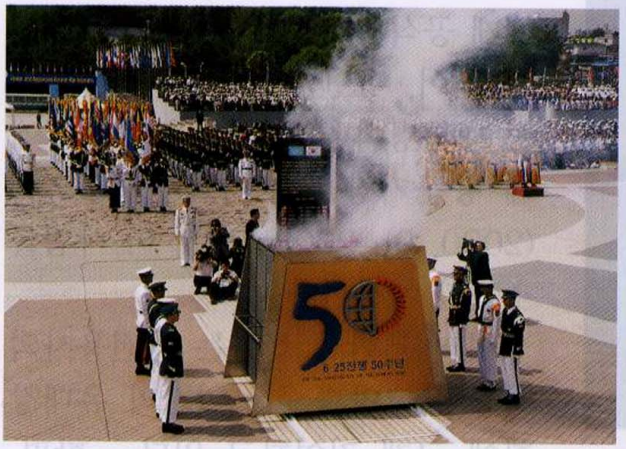
라. 참전국간의 유대강화로 세계 속의 국가 신인도 제고사업

우리가 위기에 처해있을 때 함께 싸워준 참전우방국과 참전용사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함으로써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안보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에 참전국 대표 및 참전용사를 초청하고 한국에서 실시하는 참전국 행사를 적극 지원하며 참전국에서 실시하는 주요기념행사에 한국대표를 참석시키고 있다.

2000년 6월 25일에는 '6 · 25전쟁 50주년 중앙기념행사'가 대통령을 비롯한 참전 21개국 국방장관 및 주한외교사절, 국내 · 외 참전용사 등 10,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쟁기념관에서 엄숙히 거행되었다. 이 행사에는 유엔군 3만 8천명, 국군 3만명의 '전사자 명비' 봉헌과 '6 · 25전쟁 특별기획전' 개막식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6 · 25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부각시키고, 참전국과 참전용사에게 국가 신인도를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6 · 25전쟁 당시 주요전투와 연계하여 낙동강 전투, 인천상륙작전, 서울수복, 육 · 해 · 공군 전투기념행사 등 호국안보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전투기념행사를 국내 · 외 참전용사 및 학생, 시민이 함께 하는 행사로 실시하였다.

한국에서 실시한 참전국 기념행사 지원을 위하여 오산에서 실시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 기념식 행사'(2000. 7)와 한 · 미 연합사령부에서 실시된 '장진호전투 기념행사' 등에 6 · 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위원장 등 한국대표가 참석하였다. 그리고



▲ 6 · 25전쟁 50주년 중앙기념행사시 '전사자 명비' 봉헌

▲ 6 · 25전쟁 50주년 중앙기념행사시 화환증정

참전국내 기념행사 지원으로 미국에서 실시된 '워싱턴 6·25전쟁 개전행사', '6·25전쟁 참전용사의 날 행사', '노폭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및 뉴욕시에서 주관하는 국가급 퍼레이드와 호주 캠브라에서 실시된 참전기념비 준공식 등에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위원장, 연합사 부사령관 및 국가보훈처관계관 등 한국 대표가 참석하여 참전국간의 유대강화를 도모하였다.

▲ 6·25전쟁 참전비 준공식 참전국 행사(호주)

6·25전쟁 참전 21개국의 참전단체 및 참전용사 개인에게 대통령 감사서한을 발송하였다. 서한에서 대통령은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면서, 특히 새 천년을 맞이하여 세계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된 자유 민주주의 이념을 실천한 공헌을 높이 평가하면서 인류 발전과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참전용사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대해 참전국은 일간지, TV 등을 통해 진심 어린 감사라고 보도함은 물론 개인별로 6·25전쟁 참전에 대해 자긍심을 느낀다는 감사 답신을 보내왔으며, 서한을 액자화하여 거실에 부착하겠다는 등 최대의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해 왔다.

6·25전쟁 당시 '6·25전쟁 종군 기장'을 수여하였으나, 미국 및 일부 영연방 국가는 외국 상훈을 받을 수 없다는 참전국 국내법의 제약으로 인해 종군 기장을 수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6·25전쟁 50주년을 맞이하여, 기장 수여를 요청하는 미국 참전용사들에게 종군기장을 제작하여 국방부 장관이 주한 미군사령관에게 공식 전달식(2000. 7)을 가진데 이어,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시 대통령이 미국 참전용사 대표에게 종군기장을 수여한 바 있으며(2000. 9), 2003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6·25전쟁 종군기장 및 대통령감사서한 전달장면

이러한 한국 정부는 참전용사의 자긍심 고양과 한·미간의 유대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영연방 국가의 일원으로 참전하였던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종군기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해외 참전용사 및 가족초청 위로행사, 재외 공관을 통한 자체 기념행사 지원, 해외 주요언론 한국특집기사 게재 등을 추진함으로써 해외 참전용사들의 자긍심을 고양시키고 참전국간의 유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제4절 국방정책 결정 과정에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국방시대는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 전체의 관심 및 참여의식이 고양될 때만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정책이 투명하게 수립, 집행되어야 하고 수립된 정책은 국민에게 사실대로 전달되어야 한다. 그 일환으로 국방의 사결정과정에 각계 민간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국방부는 국방정책의 수립 및 결정 시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다.

1. 국방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국방부는 1981년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방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국방업무에 대한 민 군간 상호이해 제고에 힘써 왔다.

국방정책자문위원회는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학계 및 언론계등 각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로부터 주요 국방정책에 대해 자문을 받는 기구로 정책, 군비통제, 정훈/공보, 기획예산, 법무, 인사/복지, 동원, 군수, 획득, 시설, 정보체계, 합참의 12개 분과위원회가 있으며 총 44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정책자문위원들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연 1회 개최되는 전체회의와 분기에 1회 이상 개최되는 분과위별 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방문 또는 서신 등을 통하여 수시로 자문에 응하고 있다.

1999년에는 '오·폐수 처리시설 시공평가', 'KNTDS(한국해군전술자료체계) 지휘·통제사업' 등 총 15건의 정책에 대하여 자문한 바 있으며, 2000년에는 '평화공존기 남북군비 축소시 보유 제한선 타당성' 등을 자문하였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자문위원들을 적극 활용하여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2. 민간 전문가의 정책결정 참여 기회 확대

과거 민간 전문가의 국방정책 결정 참여는 설문조사를 이용한 의견 수렴, 연구 결과물의 정책 수립 자료로의 활용, 세미나를 통한 의견 교환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국방부는 민간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 수립 · 결정에 그들을 직접 참여시키고 있다. 1997년에는 '국방정책검토위원회'에서, 1998년에는 '국방개혁추진위원회'에서 그리고 1999년에는 '군사혁신기획단'에서 민간 전문가들이 자문 ·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다.

특히 '군사혁신기획단'의 경우, 일반사회로부터 다양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군내 전문가 및 민간전문가를 '풀(Pool)' 개념의 비상근 전문위원으로 위촉 ·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민간 학자들이 국방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1996년부터 민간부문의 국방관련 학술세미나를 장려 ·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의 연구실적은 관련된 정책의 검토와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여 왔던 정부출연금을 사용한 연구과제 수행은 1999년도부터는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방관련 연구기관과 민간 연구기관간 경쟁을 통해 수행토록 하였다. 이와 같은 경쟁을 통해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민간전문가의 정책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제2장 국민의 편익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

제1절 환경친화적 군 관리

군은 국토방위라는 기본임무 수행과 함께 주둔지역 내에서 스스로 환경법규 준수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국토환경 개선을 위해 부대별·지역별 환경보전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1. 군 환경관리 기반 확충

가. 환경업무 수행체계 발전

군은 방대한 조직으로서 장병이 병영 내에서 의식주를 해결해 나가는 특수한 집단이다. 따라서 병영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원을 스스로 확인하고 제거해 나가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환경업무의 전문화 및 전담화가 요구된다. 군은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방부 및 각군본부에 환경전담부서(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하 제대에도 환경군무원제도 등을 통해 환경업무 수행체계를 점진적으로 전문화시켜 왔다.

그러나 군 보유 환경기초시설과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등 각 분야에서의 군 환경개선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군 환경업무 수행체계의 획기적인 발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요 충족을 위한 첫 조치로, 군 입영대상자 중 전문대학 이상 환경 관련 학과 출신 및 환경 유자격자에게 환경 주특기를 부여하는 환경 특기병 제도를 2000년부터 발전시켜 환경기초시설 운용 및 군 환경관리 전반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2005년까지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완료할 것이다.

나. 장병 환경교육 강화

군은 지휘관을 비롯한 장병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을 향상시키고 환경보전을 생활화하여 군의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사회 환경보호의 역군이 될 수 있도록 장병들의 환경관 정립 및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장성급 장교 보수교육 과정에 환경교양교육을 시행하여 고급지휘관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있으며, 앞으로는 공병학교 등에서 환경 특기병 양성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장병 환경교육은 각급 군 교육훈련기관 및 자대교육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환경부 및 각 지방환경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각종 환경단체 임직원 등을 강사로 초빙하고 있으며, 정훈교육시간 등을 활용한 지휘관 기회교육에도 환경에 많은 비중을 두고 교육하고 있다.

한편 군은 환경교육 발전을 위해 1999년에 연구된 '군 환경교육 기준 및 프로그램 개발'을 기반으로 군 환경교육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군의 특성에 적합한 환경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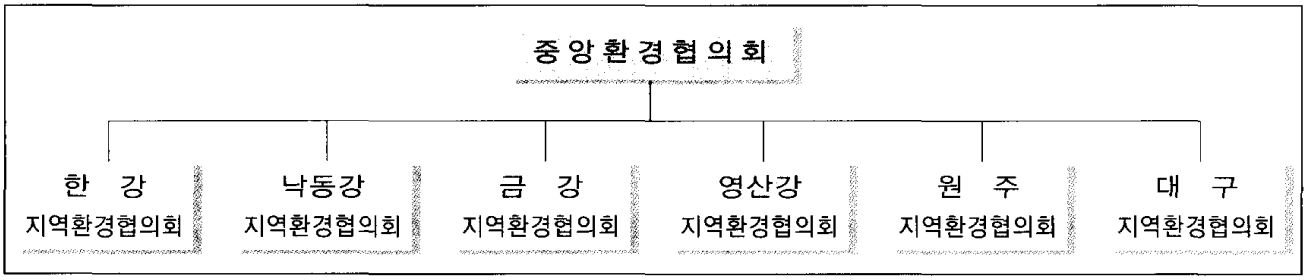
다. 군 환경 대외협조체제 구축

1998년도에 결성되어 운용되고 있는 관 · 군 환경협의회는 중앙협의회 1개소와 4대강 수계(水系) 및 대구와 원주지역의 6개 지역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협의회별로 4~5회의 정기회의와 수시 협의를 통해 군 및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고 있다.

환경협의회 사업의 일환으로 대암산 용늪 및 백두대간 환경복구 활동, 민통선 지역 생태계 조사활동 지원 등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한강수계 환경정화 활동 등 매년 수 차례에 걸쳐 관 · 군 합동으로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군이 수거한 군항(軍港)폐기물 처리 등 쟁점사항을 서로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기술 및 교육교재, 강사요원, 오염측정 인력 ·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도표 5-8] 관 · 군 환경협의회 구성체계도



※ 각 협의회 위원 : 20여명(군 및 환경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구성)

또한 국방부는 환경부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소위원회를 통해 주한미군 주둔지 환경보전 노력에 동참하고 있으며 주한미군과 공동 운영중인 한 · 미 군간 환경실무협의체를 통해 환경문제에 대해 상호 협조를 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국제군 환경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선진국 군의 발전된 환경기술 및

정보를 획득하고 우리 군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군 환경협력의 기반 조성을 위해 '국제군 환경협조체제 발전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다.

▲ 군 환경보전학술대회

라. 군 환경 연구활동 전개

군은 군만의 독특한 환경 위해(危害)요인을 제거하고 '환경관리체계 정립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1998년도부터 주기적으로 개최되는 '군 환경보전학술대회'를 통해 군 환경실무자 및 환경전문가들의 군 환경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장병의 환경보전의식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2. 주둔지 환경오염 방지사업

가. 환경 기초시설 및 장비확충

군은 주둔지 및 주요 활동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 등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 많으나 군 주둔지는 군사시설보호법 등 특별법령에 의해 외부인의 관찰이나 접근이 어려운 실정으로 관할지역 환경보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보유한 군 스스로의 환경보전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은 오·폐수처리시설 등 법정처리시설 및 장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군의 환경관련법규 위반사례를 방지하고 군 주둔과 운용에 의한 환경오염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해 나가고 있다.

군은 2000년도 말까지 706개소의 오·폐수 처리시설을 확충하게 되며, 향후 2001년까지 한강·낙동강수계, 2002년까지 금강·영산강수계, 2003년까지는 기타 전지역의 오·폐수 처리시설을 완비할 계획이다.

[도표 5-9] 환경시설/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계획

구 분	총소요	1999보유		2000계획		2001~2005		2006년 이 후
			누계(%)		누계(%)		누계(%)	
환경기초시설(개소)	4,427	764	17	87	19	3,576	100	
환 경 장 비 (점)	5,789	3,400	59	117	61	1,394	85	878

※ 환경시설에는 토양오염방지시설 2,256개소(총 시설의 51%)가 포함됨.

또한 소각로, 토양오염방지시설 등 총 4,427개소의 환경시설을 2005년까지 확충하고 법정기준 강화로 기능이 미흡한 기존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개·보수 작업도 조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시설 및 장비의 발전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수집과 전시회 개최 등 환경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갈대습지·부레옥잠·미나리밭 등을 통한 '오수 자연정화 방안'도 실용단계에 있다.

나. 폐기물 관리 및 자원 재활용

군은 엄격한 폐기물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 발생 생활 폐기물은 자체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하거나 군 진개차 또는 종량제봉투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처리업체에서 처리되고 있다. 한편 폐유, 폐산, 폐알카리 등과 같이 환경오염을 심화시킬 수 있는 지정폐기물은 재활용을 위해 자체 처리하는 것 외에는 전문폐기물업체에서 처리되도록 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있다. 아울러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 1999년말 현재 19,991개소의 쓰레기 분리수거대를 전군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도표 5-10] 군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1999년 기준) (단위:톤)

구 분		발생량	위탁처리	자체처리		
				재활용	소 각	보관
계		222,424	151,726	44,433	12,114	14,151
생활폐기물	일반쓰레기	147,053	118,745	15,838	11,601	869
	음식물쓰레기	32,780	6,992	25,331	457	-
지정폐기물		19,130	9,118	2,386	0	7,626
건축폐기물		23,461	16,871	878	56	5,656

다. 군사시설 환경영향평가

군은 각종 군사시설 건설사업계획 추진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군 사업에 수반될 수 있는 환경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을 미연에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 환경시설 위탁관리방안 강구

군이 환경실태를 조사하고 문제 유형별로 대책을 수립하며 환경시설과 장비를 확충·운용하는 등 환경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위 부대마다 환경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투력 유지 및 개선 위주로 편성된 군 조직 내에선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각급 제대에 환경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단기

간 내에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군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전투력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군 환경관리의 전문성 및 경제성, 효율성 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현재 일부 제대에서 시행중인 환경위탁관리 제도를 발전시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군 환경시설 관리를 위해 민간환경관리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하게 되면 현재 각급 부대 지휘관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군 환경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도 있어 군이 안심하고 전투력 향상에 전념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3. 자연환경 보전활동 강화

가. 지역환경 정화활동 전개

군은 병영 내의 환경오염방지 활동과 병행하여 부대주변의 지역환경 정화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생활공간을 깨끗이 정화하고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해군은 서해와 남해에 산재한 60여개 도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해양수산부의 협조를 받아 낙도 봉사단을 결성·운용하는 등 해양환경 개선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육군은 백두대간 환경복구 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 주둔지 및 작전/훈련지역 자연환경보전대책 추진

군의 관할지역은 그 면적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산림지역, 자연생태계 보전지역, 청정지역 등 자연생태계 보전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에 다수 위치해 있고, 작전·훈련 등 군의 활동은 직접 자연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경우가 많아 동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군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군의 활동범위는 대상지역이 전 산야에 걸쳐 확대되며 도처에 참호와 장애물, 숙영시설 등을 설치하고 가시공간 확보를 위한 수목제거 작업 등 자연환경에 인위적 변화를 가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각급 제대의 각종 훈련 시에도 매년 반복되게 되는데 군은 지휘관 및 장병의 환경

▲ 군 환경보호활동

보전 의식을 높이고 훈련계획을 수립할 때는 환경보전을 위한 대책도 반드시 고려토록 하여 훈련 중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훈련 후에도 부득이하게 훼손된 자연환경은 가능한 원상태로 복구토록 노력하고 있다.

4. 환경복구사업 전개

가. 오염토양 복구사업 추진

유류저장시설의 유류누출에 의한 토양오염은 토양뿐만 아니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주변 농작물을 황폐화시키는 등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민원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군은 1,300여 개소의 유류 저장시설에 대하여 2000년까지 1차 토양오염검사를 완료하고 검사결과 오염된 토양은 우선 순위에 따라 연차계획에 의해 2010년까지는 복구완료할 예정이다.

[도표 5-11] 유류저장시설 토양오염검사 실시/계획 현황

구 분	계	1998실시	1999실시	2000계획
토양오염검사(회)	1,242	228	623	391

※ 검사대상시설 : 2만리터 이상 유류저장시설(복원개소는 대상시설의 25%로 추정)

1997년도부터 추진중인 부산지역 구정비창 부지의 오염토양복원 사업 중 제1정비창 지역은 복원이 완료되었으며, 제2정비창 지역은 토양오염 조사를 완료하고 부산시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복원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나. 오염환경 복구기반 확립

군은 유류 누출, 폐기물 매립 등으로 인한 오염토양 복구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아직 다양한 오염유형별 토양복원 기술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특정무기체계 운용에 따른 특이한 오염유발 요인도 존재하고 있어 오염환경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개발 및 복원절차 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군은 오염환경 복구를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는 군 자체 예산에 의해 진행되기도 하고 때로는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한 외부 연구기관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군 관할지역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협조로 유류오염에 의한 '오염토양시험복원 시범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며, 1999년도에는 오염토양 복원절차 및 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오염지역에 대한 탈 오염처리 및 복원사업 추진시에는 오염 허용기준 및 단계별 처리목표를 객관적으로 설정하고 복원 완료시까지 각 단계별 관련정보가 유기

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축적된 정보를 유사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5. 작업환경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

국방부는 '군 작업환경 및 작업자 보건관리규정'과 '군 방사선 안전관리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하여 군사시설 내의 유해환경 요인인 중금속, 유기용제, 소음, 분진, 의료 · 산업용 방사선 등의 관리방안과 군 작업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다. 1999년에는 육군종합정비창 내에 군 방사선 안전도 검사기관을 설치하여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군 작업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각 군별로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작업환경 측정기관을 2002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군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장병의 건강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군사용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지침'을 2001년 초에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물질별 관리방법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국방인트라넷에 게시함으로써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군내 어디서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추가되는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자료를 갱신해 나갈 계획이다.

제2절 지역사회와 군 시설

1. 군 사용 사유지 정리

우리 군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 및 정리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군에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를 매수 · 보상하고 있으며,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는 사유지는 소유자에게 즉시 반환하고 있다.

또한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의 소유자가 유휴 국유지와 교환을 희망할 경우에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는 일반회계예산뿐만 아니라 유휴 국유지 매각대금을 활용한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예산으로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적극 매수 · 보상하고 있다. 아울러 군사목적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토지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토지를 매수한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 동안 군의 사유지 정리실적은 아래와 같다.

[도표 5-12] 군 사용 사유지 정리현황

구 분	총 대 상	기 정 리 (1983~1999)	정리계획	
			2000	2001이후
대상토지(만평)	4,702	3,203	231	1,268
소요예산(억원)	5,468	3,191	490	1,787

2. 군용시설 이전 추진

우리 군은 국민생활 편익증진, 도시균형 발전 및 효율적인 국토이용, 군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심지역 등의 군 시설을 연차적으로 이전하고 있다.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6년부터 1999년까지 총 3조 1백억원을 투자하여 209개 부대를 이전하였고, 2000년에는 2,001억원의 예산으로 44개 부대 이전사업을 추진하여 이중 12개 부대를 이전하였다.

[도표 5-13] 군용시설 이전 현황(1999년말 기준) (단위:부대수)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원주	인천	기타
총사업('66~'99)	209	53	40	18	20	18	23	9	28
· 1999년 사업	10	1	1	1	1	0	1	0	5

앞으로도 군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 등 공익사업 시행자가 대체시설을 건설하여 군에 기부하고, 대신 기존 군시설을 인수하는 방식의 사업을 병행하여 군시설 이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3.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우리 군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관련법(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접적지역과 주요 군사시설 주변에 33억 7천여 만평을 군사시설(기지)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해오고 있다.

그러나 국토의 많은 부분이 군사시설(기지)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제한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군 작전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제도개선과 완화 가능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첫째,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된 각종 법규를 1997년부터 1999년 전반기에 걸쳐 제·개정한 바 있으며, 민통선 북방 통제보호구역내 취락지역이나, 통일정책 관련 사업지역, 안보관광시설지역에 대하여 일부를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하였다. 종전까지는 탄약고 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택의 신·증축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철도·도로공사 등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보호구역내 주택이 불가피하게 철거되어야 할 경우에는 이전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그리고 비행장의 외곽경계선으로부터 5km이던 지원항공기지의 보호구역을 2km로 축소하였으며, 헬기전용 작전기지도 축소 조정하여 항공기지 주변의 규제범위를 완화하였다.

둘째, 1998년 8월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사전분석제도'를 시행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각종 건축행위의 허용고도를 명시한 '사전분석도'를 행정기관에 비치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열람·활용케 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다. 1999년 11월에는 경기도 파주, 문산, 연천 등 34개 지역 1,500여 만평의 군사보호구역 협의 업무를 행정기관에 위임하였다.

셋째, 1998년 6월에는 수도권 개발지역 등 군 작전에 영향이 없는 10개 지역 327만 2천여 평을 보호구역으로부터 해제하였다. 그리고 민통선 내 취락마을 16개 지역 233만평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건물 증·개축 행위를 완화하였다.

[도표 5-14]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실적 (단위:만평)

연도	계	1980이전	1981~1985	1986~1988	1989~1993	1994	1995~1998
해 제	88,052	850	1,500	30,850	832	53,518	397
변 경	9,723	260	425	3,251	832	4,267	688

제3절 대민 지원 활동

1. 군의 대민 지원사업 및 국책사업 지원

가. 군의 대민 지원사업

우리 군은 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하여 기본임무 수행에 제한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이 보유한 인력, 장비 및 기술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민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농촌의 일손부족 등으로 적기에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농기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모내기, 벼베기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수로 보수, 농경지 정리 등 영농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고 있으며 농기계수리봉사단을 편성하여 농기계 서비스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 위주로 순회하면서 농기계를 수리하여 주는 등 기술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도표 5-15] 1999년도 농촌일손돕기 지원 현황

참여인원	동원장비	주 요 지 원 실 적				
		영농지원	농기계수리	농수로보수	식수지원	의료지원
772,931명	5,593대	5,614정보	7,659대	217km	179톤	24,694명

한편 군은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무료진료와 방역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변의 사회복지시설 또는 불우이웃과 '1부대 1개 이상 자매결연맺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법률적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한 대민 무료법률상담도 실시하는 등 연중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2000년 3월말부터 4개월간에 걸쳐 경기도 파주와 홍성 등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에는 일일 평균 330명의 군병력과 90여대의 제독차량을 지원하여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등 방역활동을 실시하였다.

나. 국책사업 지원

군은 국민의 편익증진과 국가 기간산업의 발전을 위해 도로건설과 농촌 경지 정리사업 등 국토개발에 계속 참여해 왔다.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자유로 노반공사에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였고, 1996년에는 백령도, 대청도 도로 개선공사를 완료하였다.

최근에는 1997년 5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강화도 해안순환도로 공사에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19km 구간의 노반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2단계 공사로서 2000년 6월부터는 9.5km 구간에 대해 1개 중건설중대와 굴삭기 등 각종 토공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1년 12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군의 지원으로 약 180억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 공사가 완료되면 접경지역의 교통·관광·영농 등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군 작전 능력도 향상될 것이다.

▲ 강화도 해안도로 공사

2. 재해 · 재난 지원활동

가. 재해 · 재난 지원을 위한 군의 준비

우리 군의 재해 재난 지원활동은 국가적 차원의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에 근거한 '재해대책업무 처리규정'과 '탐색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규칙'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며, 능동적인 구조지원활동 수행을 위한 다각적인 준비태세를 갖추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첫째, 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탐색구조부대는 특전사 · 항작사 · 해작사 · 공작사 예하의 특수능력을 구비한 18개 부대로 구성, 합동참모본부 예하에 설치되어 상시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항공기 사고, 선박의 조난 등 사고유형에 따라 임무 수행에 적합한 부대를 파견시키고 있다.

둘째, 재난구조부대를 설치 · 운영하고 있다. 군은 광역시 · 도 단위로 1개씩 총 14개의 재난구조부대를 지정하여 행정관서의 요청이나 주민신고시에 응급복구 지원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난구조부대와 행정관서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합동훈련과 민 · 관 · 군 합동 재난구조 시범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셋째, 효과적인 구조지원을 위해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였다. 즉, 육 · 해 · 공군의 지원병력과 장비를 통합 지휘할 수 있도록 지상지원은 육군의 군단장 책임하에 실시하며, 해상지원은 함대사령관의 책임하에 두었다.

넷째, 대형 자연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연대급 이상 부대에 재해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폭설 및 폭우 다발지역의 인근부대에 제설차, 불도저, 포크레인 등 복구장비를 사전 배치하여 대비하고 있다.

다섯째, 전국 어디에서나 지원 요청을 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군부대로 자동연결 되는 전화(080-960-6119)를 개설하여 주민신고의 편의를 제공하고, 재해발생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부대의 병력 및 장비가 긴급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선지원 · 후보고' 체제를 확립하였다.

여섯째, 재해 · 재난 구조지원 능력향상을 위하여 1996~1999년에 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명구조장비를 확보하였으며, 2000년 말에는 8.7억원의 장비를 확보할 예정이다. 군은 인명구조장비 구입을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탐색 · 인명구조장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구조지원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일곱째, 재해 · 재난시 의료 · 방역 · 수질검사 · 세탁 · 급수 등의 총체적 개념에 의하여 대민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구급차 접근이 곤란한 지역의 응급환자 및 중환자 후송시 기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항공 의무후송중대를 운영하고 있다.

나. 재해 · 재난 지원활동 실적

1999년의 자연재해는 도표 5-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와는 달리 재해양상이 국지적 ·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규모 또한 대형화된 추세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필수 작전병력을 제외한 가용병력 및 장비를 최대한 투입하여 신속한 복구지원 활동을 수행하였다.

▲ 군의 재난 · 재해 복구 활동

1999년 8월의 집중호우시에는 군부대도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선 대민지원 · 후 군피해복구'라는 방침 아래 우선 대민지원을 실시하고, 차후에 군이 입은 피해를 복구하였다.

앞으로도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각종 재해 · 재난 발생시 적극적 지원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내실있는 훈련과 장비를 보강하여 국가위기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도표 5-16] 1999년 대민지원 실적

구 분	지원		실적					
	병력 (명)	장비 (대)	인명구조 (명)	도로복구 (km)	제방하천 복구(km)	대민진료 (명)	농지보수 (ha)	기 타
계	1,446,651	20,452	578	534.9	485.3	12,861	1,429.1	
태풍 '올가' 수해복구 (7.31~8.25)	1,103,123	20,452	578	534.9	485.3	12,861	131.0	· 이재민 수용 306명 · 수상주민대피 3,430명 · 가옥정리 21,071동 · 담 장 8,274m · 산 사 태 114개소 · 방 역 22,274ha · 세탁지역 72,650kg · 급수지원 19,939톤 · 쓰레기처리 427톤
태풍 '앤', '바트' 벼세우기지원 (9.21~10.7)	343,528						1,298.1	· 육 군 : 297,655명 3,819.8ha · 해 군 : 22,448명 202.84ha · 공 군 : 14,864명 151.15ha

부 록

여 백

1999 세계 분쟁 현황

지 역	충돌분쟁	대립분쟁	잠재분쟁	계
미 주	콜롬비아내전 멕시코내전 페루내분		포클랜드분쟁	4개
아프리카	부룬디내전 기네아-비소내분 나미비아분쟁 라이베리아내전 이디오피아내전 르완다내전, 앙골라분쟁 우간다분쟁 이디오피아-에리트리아 국경분쟁 차드분쟁, 소말리아내전 시에라리온내전 콩고(자이르)분쟁 콩고(브라자빌)내분 나이지리아내분 수단내전, 알제리내전	이집트-수단분쟁 서부사하라분쟁 나이지리아-카메룬 국경분쟁 세네갈내분 지부티내분 케냐정/부족분규 토고정쟁 이집트 종교분규	니제르내분 레소토사태	27개
중 동	터키쿠르드족분쟁 레바논내전 이란-이라크분쟁 이라크내분 팔레스타인분쟁 미·영-이라크분쟁(걸프전쟁) 이란내분	이란-UAE영유권분쟁 이스라엘-시리아분쟁 이란-아프가니스탄분쟁	이라크-쿠웨이트분쟁 이스라엘-요르단분쟁	12개
아 시 아	스리랑카내전 인도네시아분리운동(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내전 미얀마분쟁, 인도분리운동 캄보디아내전 카슈미르분쟁 필리핀내전, 남북한대립 네팔내분, 방글라데시내분	남사군도분쟁 서사군도분쟁 센카쿠/조어도분쟁 중국-대만대립 중국-인도국경분쟁 쿠릴열도 영유권분쟁 티베트독립운동		18개
C I S	그루지아-압하지아분쟁 타지크내전 러시아-체첸분쟁 우즈백내전 키르키즈내전	몰도바내 분리운동 아제르-아르메전쟁 에스토니아-러시아분쟁 북오세티아-잉구시분쟁		9개
유 럽	코소보독립분쟁 북아일랜드 분리운동	그리스-알바니아분쟁 사이프러스분쟁 알바니아내분	그리스-마케도니아분쟁 루마니아 민족갈등 보스니아 내전 보이보디나 자치분쟁 불가리아 민족운동 슬로바키아 민족갈등 에게해 분쟁 이스트리아영유권분쟁	13개
전 체	45개	25개	13개	83개
	소 계 : 70개			

※ 자료 : 한국국방연구원 '세계 분쟁의 양상과 전망' (www.kida.re.kr)

핵 보유국의 핵전력 현황

구 분		미 국	러 시 아	중 국	영 국	프 랑 스
I C B M (대륙간탄도미사일 5,500km이상)	개수	550기	756기	35~40기	0	0
	종류	미니트맨 III : 500 피스키퍼 : 50	SS-18 : 180 SS-19 : 160 SS-24 : 46 SS-25 : 370 SS-27 : 20	CSS-4:15~20 (DF-5) CSS-3/20:10 (DF-4)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 2,500~5,499km) MRBM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800~2,499km)	개수	0	0	46기	0	0
	종류	-	-	CSS-2 : 38 (DF-3) CSS-5 : 8 (DF-2)		
SLB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개수	432기	412기	12기	48기	?
	종류	트라이던트 C-4 : 192 트라이던트 D-5 : 240 (SSBN:18척)	SSN-8 : 60 SSN-18 :160 SSN-20 : 80 SSN-23 :112	CSS-N-3 : 12	트라이던트 D-5 : 48 (SSBN:3척)	M-51 : ? M-45 : (SSBN: ?척)
전략폭격기	개수	178대	74대			
	종류	B-2A : 17 B-1B : 91 B-52H : 70	TU-95 : 68 TU-160 : 6			

※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1999 – 2000

주변국의 군사력 현황

■ 총 괄

구 분	미 국	러 시 아	중 국	일 본
총 병 력	1,371,500	1,004,000	약 2,480,000	36,300
예 비	1,303,300	약 20,000,000	1,200,000+	49,900

■ 육 군

구 분		미 국	러 시 아	중 국	일 본
병 력	현 역	469,300	348,000	1,830,000	145,900
	예 비	783,900	?	1,000,000	?
사 단 (예비)		10(8)	37	80	12
전 차		7,684	15,500	9,300	1,080
경 전 차		6,715	200	1,200	-
정 찰 전 차		113	2,000	-	90
장 갑 차		17,800	26,300	5,500	840
견 인 포		1,593	2,075	14,500	460
자 주 포		2,555	2,636	다 양	310
다 련 장 포		857	900	〃	110
박 격 포		879	254	〃	1,250
대 전 차 유 도 무 기		토 우 8,457 드래곤 24,400 재블린 500	AT계열의 다양한 형태 보유, 보유수는 불분명	다양한 형태 보유, 보유수는 불분명	680
지대공 미사일		1,737	2,300	11	710
헬 기		4,923	2,300	143	453
항 공 기		249	-	-	10

■ 해 군

구 분	미 국	러 시 아	중 국	일 본
병 력 (예비)	369,800 (23,480)	171,500	230,000	43,800
잠수함(전략)	84(18)	70(21)	71(1)	16
항 공 모 함	12	1	-	-
순 양 함	27	7	-	-
구 축 함	54	17	18	9
프 리 기 트	37	10	35	46
해안초계함	21	112	676	3
소 해 함	26	72	119	34
상 륙 함	42	25	70	6
상 륙 정	202	?	140	-
지 원 함	92	436	160	29
수 송 함	24	-	39	10
전략수송함	86	상선 약2,800	?	-
예비수송함	142	-	-	-
전 투 기	1,510	114	435	90(P-3C)
헬 기	506	362	176	100
해 병 사 단	3	1	2(여단)	-

■ 공 군

구 분	미 국	러 시 아	중 국	일 본
병 력 (예비)	361,400 (176,500)	210,000	470,000	45,600
장거리폭격기	208	232	폭격기 320	-
정 찰 기	259	135	290	26
지 휘 기	40	-	-	-
전 투 기	2,598	1,455	3,000	363
수 송 기	1,051	약 280	425	43
급 유 기	606	20	?	-
훈 련 기	1,217	1,000	200	170
헬 기	216	-	210	-
민 간 예 비	630	1,500	?	-

※ 자료 : The Military Balance 1998-1999